

Hansun Brief

발행일: 2017년 3월 14일(통권42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대통령 탄핵 이후의 과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 승복·불복 여부를 떠나 헌정기구가 내린 최종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기와 법치의 기본이다.

3개월 가까이 광장에서 대치를 거듭해 온 '촛불'과 '태극기'의 열정도 이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한쪽은 환호하고 다른 쪽은 비통해 하는 모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양측의 애국심은 상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교훈을 찾아 한층 성숙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아래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자.

첫째, 차기 대통령은 당적을 정리하고 거국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해묵은 구조개혁을 원만하게 이뤄낼 수 있다. 지금 상황에 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여소야대' 정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정당이나 계파의 틀에 갇혀 공천에 개입하고, 국회에선 '찬성을 위한 찬성'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연정'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정당의 합리적인 인사들이 중용된다면 금상첨화다.

둘째,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과 단임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선거빈도를 줄이는 방향의 개헌이 불가피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의 줄기는 견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었다. 대통령 단임제로 국정 시계(視界)가 짧아지고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됐다. 잦은 선거는 개혁의 걸림돌이며 표심의 정책 왜곡을 부추긴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하든지, 너무 촉박하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

셋째, 수사 관행을 선진화해야 한다. 특검이 보여준 모습은 덴마크 검찰의 차분하고 엄격한 자세와 뚜렷이 대별됐다. 법으로 금지된 기소하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해 피의자 명예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발표가 중계하듯 이어졌다. 피의자를 불러 밤새우며 22시간이나 조사한 것은 가혹행위에 가깝다. 부르지도 못한 기업인들의 무더기 출국 금지는 성급했고,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할 구속수사도 남용됐다. 특검이 출범한 후 '태극기집회'의 세가 크게 불어난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도 바로잡아야 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확인할 수 있었던 기초사실조차 틀린 오보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질과는 무관한 사안을 침소봉대한 일도 수두룩하다. 한쪽으로의 쏠림은 위험하다. 언론의 균형추 역할이 절실하다.